

5·18 진조위 조사 종료 2년…“2기 조직 필요”

진상규명 방안 모색 토론회

광주시의회·전남대 RISE 공동 주최
김희송 교수 “진실·왜곡 공명 보고서”
권고사항 11개 이행 1년반 넘게 ‘감감’
보관 국가기록원 접근 난항 등 문제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활동을 공식 종료한 지 2년여가 돼가지만, 미진한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 미이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기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대학교 RISE사업단은 16일 시의회에서 ‘5·18조사위 진상규명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다은 시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가 ‘탈진실의 시대, 5·18의 진실을 다시 묻기: 5·18조사위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성찰적 비판’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희송 교수는 “조사위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는 진실과 왜곡·폄훼 주장이 공명한다는 점”

이라며 “때문에 두 가지가 함께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가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이나, 일반 인의 접근이 제한된 것을 두고 “사회적으로 해석하고 공유할 수 있는 후속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위가 지난해 6월 보고서 제출과 함께 정부에 권고한 11개 사항에 대한 이행이 약 1년6개

월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도 문제로 떠올랐다.

김대인 광주시 진상규명팀장은 “상당수 권고사항은 아직 공식적인 답변조차 나오지 않았다”며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계 부처에 책임을 묻는 주체가 사라진 것이 현재의 가장 큰 한계”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에 이어 박진우 5·18기념재단 진실기

록부장도 국가기록원 접근 난항을 문제 삼으며 “기록이 봉인된 채로 남게 되면 진실은 현재형 역사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토론회 참석자들은 5·18 진상 규명을 이어가며 기존의 결과물을 관리·점검할 ‘2기 조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원상 조선대 민주평화연구원 사무국장은 “진상 규명은 한 차례 조사로 종결될 사안이 아니라, 새로운 증언과 자료가 등장할 때마다 갱신해야 한다”며 “재조사 여부와 별개로 상설 연구·검증구조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조사위 종료 이후 시민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불안은 ‘이제 누가 책임지느냐’는 점”이라며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책임 구조가 다시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정다은 시의원은 “진상 규명은 과거를 밝히는 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과정”이라며 “조사 이후를 설계하지 못한 한계를 인정하고 2기 진상규명 체계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윤천웅 기자



광주시의회와 전남대학교 RISE사업단은 16일 시의회에서 ‘5·18조사위 진상규명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다은 시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가 ‘탈진실의 시대, 5·18의 진실을 다시 묻기: 5·18조사위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성찰적 비판’을 주제로 발제했다.

/윤천웅 기자

경찰, ‘붕괴 광주대표도서관’ 시공사 등 4명 입건

현장 감식서 ‘부실 용접’ 등 살펴

국토부, 별도 조사위원회 가동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관련자를 입건하고 현장 감식에 나서는 등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 관계자 등 4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께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실시한 2차 압수수색까지 포함해 총 7개 업체, 10곳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15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예고된 합동 감식도 진행됐다. 이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과 오후 2시30분께부터 약 3시간 동안 사고 현장을 조사했다.

감식 과정에선 참여 인원들이 ‘부실 용접’의혹이 제기된 철제 구조체의 접합부 등을 면밀히 살피는 게 포착됐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추가 현장 확인을 통해



16일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부실 시공 가능성 등 이번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한편 경찰과 별도로 국토교통부도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 붕괴 사고의 원인 파악 등에 착수했다.

위원장은 강구조·건축구조 분야 전문가인 최병정 경기대학교 교수가 맡았고, 산·학·연 중심

의 외부 전문가 12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전절차 적정성 ▲설계도서 작성·검토 준수 여부 ▲시공과정 중 품질·안전관리 확인 ▲공사 주체별 의무 이행 상태 ▲하도급 선정·관리, 공기 지연 등을 검토하고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재영·이연상 기자

전남경찰, ‘제주항공 참사’ 항철위 압수수색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전남경찰청이 자료 확보를 위해 또 다른 조사 기관인 항철위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16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김포와 세종에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다만, 통상 압수수색 영장이 피의자를 특정해서 발부되는 것과 달리 이번 집행과 관련해선 항철위 측 입건자는 없

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 확보에 나서게 된 건 항철위 관계 법령상 임의 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서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제·조류 충돌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한 공항 공사 직원과 방위각 시설공사업체 관계자, 안전검사·허가 등을 담당한 전·현직 국토부 관계자 등 총 44명을 수사하고 있다.

/안재영 기자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부적격’

북구의회, 인사청문회…만장일치 결정

광주 북구의회가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인 이현수 전 북구의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북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 이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위원 7명 만장일치로 부적격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인사특위는 경과보고서에서 이 후보자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한 전력과 관련해 민주화의 상징인 광주에서 공공기관 수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관리공단이 시장으로서의 준비성과 공공

성인식역사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이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 지원인과 관련해 “지금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북구의원 재직 당시 배우자가 운영하는 꽃집이 구청에 납품한 사안과 관련해 제기된 지방계약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하거나 청탁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북구의회 인사특위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경과보고서를 최무승 의장에게 전달하고, 의장은 이를 문인 북구청장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경과보고서를 전달받은 후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윤천웅 기자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